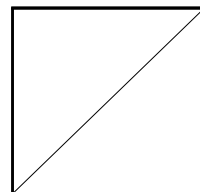


공 개



의안번호	제 74 호
의 결 연 월 일	2022. 3. 16. (제 5 차)

의  
결  
사  
항

신라자산운용(주)(舊 모놀리스자산운용(주))  
前 대표이사 ○○○에 대한 직권재심 처리안

금융위원회회의 안건

제 출 자	위원장 고 승 범
제출 연월일	2022. 3. 16.

## 1. 의결주문

신라자산운용(주) 前 대표이사 ○○○에 대한 직권재심 처리안을 <별지>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금융위원회(2019.8.28., 제15차)는 신라자산운용(주) 前 대표이사 ○○○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'퇴직자 위법·부당사행(해임요구 상당) 통보'로 조치하였으나,

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이 이에 대해 불기소 처분함에 따라 당해 처분을 취소하고자 함

※ 처분사유 중 업무상 횡령을 취소하고 나머지 처분사유를 기준으로 재조치  
: 퇴직자 위법·부당사행(해임요구 상당) 통보 → 퇴직자 위법·부당사행(주의적경고 상당) 통보

## 3. 주요골자

2019년 제15차 금융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신라자산운용(주) 前 대표이사 ○○○에 대한 원조치를 취소하고자 함

## 4. 참고사항

가.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

나. 관계법규 <붙임>

다. 관계부서 협의

- 제1차 제재심의위원회(2022.1.13.) 심의필
- 제5차 안전검토 소위원회(2022.3.8.) 심의필

<별지>

신라자산운용(주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.

- 다 음 -

## 1. 조치내용

□ 임원에 대한 조치

- 前 대표이사 ○○○ : 원조치[퇴직자 위법·부당사항(해임요구 상당) 통보] 취소\*

\* 처분사유 중 업무상 횡령을 취소하고 나머지 처분사유를 기준으로 재조치

- 직권취소 사유

· 수사기관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

- 법적근거 : 「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」 제37조 제5항

## 2. 조치사유

### 가. 업무상 횡령

□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신라자산운용(주) 前 대표이사 ○○○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‘혐의없음(증거불충분)’으로 불기소처분(2021.5.28., 2019년 형제54293호)함

- 이는 법원의 무죄판결에 준하는 직권재심 사유에 해당하므로 2019년 제15차 금융위원회(2019.8.28.) 의결에 따른 ○○○에 대한 원조치 [퇴직자 위법·부당사항(해임요구 상당) 통보]를 취소하고 “퇴직자 위법·부당사항(주의적경고 상당) 통보”로 재조치하고자 함

<붙임>

## 관계 법규

### 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】

**제3조(특정재산범죄의가중처벌)** ① 「형법」 제347조(사기), 제347조의2(컴퓨터등 사용사기), 제350조(공갈), 제350조의2(특수공갈), 제351조(제347조, 제347조의2,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), 제355조(횡령·배임) 또는 제356조(업무상의 횡령과 배임)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(이하 이 조에서 "이득액"이라 한다)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.

2.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: 3년 이상의 유기징역

### 【 형법 】

**제355조(횡령, 배임)**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**제356조(업무상의 횡령과 배임)**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### 【 자본시장법 】

**제420조(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)**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 또는 제18조·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

7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**제422조(임직원에 대한 조치)**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이 제420조 제1항 각 호(제6호를 제외한다)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음

1. 해임요구

### 【 자본시장법 시행령 】

**제373조(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)** ③ 법 제420조 제1항 제7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

9. 별표21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「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 제1항(「형법」 제355조 또는 제356조와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)을 위반한 경우

## □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

**제37조(이의신청)** ③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처리한다.

1. 금융위의 제재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 내용을 금융위에 지체 없이 통보하고,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당해 처분의 취소·변경 또는 이의신청의 기각을 금융위에 건의한다. 다만,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이의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.
  2. 감독원장의 제재처분 또는 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고,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한다.
- ⑤ 감독원장은 증거서류의 오류·누락, 법원의 무죄판결 등으로 그 제재가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재심하여 제3항 각호에서 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## □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

**제61조(이의신청)** ⑨ 규정 제37조 제5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재심하는 경우에 제재실시부서장은 직권재심사항에 대한 처리안을 작성하여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에게 심사·조정을 의뢰하여야 하며,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은 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제재실시부서장에게 통보한다.

- ⑩ 제9항에 의한 심사·조정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재실시부서장은 심의회부의안을 작성하여 제재심의담당 부서를 통해 심의회에 부의하고 제재심의담당부서장은 심의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은 제재실시부서장에게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	금융위원회	금융감독원
소관부서	자산운용과	자산운용검사국
연 락 처	02-2100-2663	02-3145-7630